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지난 주말 독도 땅을 처음 밟아보는 행운을 누렸다. 동국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가 참여하는 독도 연구팀의 학술답사 일정에 따라 가게 된 것이다.

독도평화호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은 내내 설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일본 수로부의 해도(‘조선통안’, 1893)를 최근에 발굴한 교수와 그 연구팀을 실은 배는 울릉도에서 두 시간을 달려 독도에 도착했다. 마침내 내 발이 국토의 최첨단에 닿았다.

가슴이 다시 설했다. 이게 뭐까, 특별한 경험에 대한 희열감일까. 치열한 영토 갈등 현장에 대한 체험감일까. 아니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애국심일까.

그리운 독도 강치

우리는 섬의 해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태풍 북상 조짐에 서둘러 배를 타야만 했다. 그 해안.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지표’ 표시석이 있는 곳에서 나는 내 설렘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운 강치. 그곳에서 수천 년을 행복하게 살아오다 한 세기 전 갑자기 멸종된 어버린 생명체들. 나는 그들의 평화로운 서식지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학술회의는 치밀한 논증으로 무늬를 짜 나아가고 있었다. 동국대 한철호 교수의 발표문에 일본의 영토 침략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눈에 확 다가왔다.

“명치시대에 일본이 무주지 선전에 열마나 전력하고 있는가는 1898년 미나미도리지마(南島島)를 일본령으로 편입한 뒤, 1902년 7월 이에 항의하는 로즈웰 원정대를 막기 위해 파견된 이시이 외무서기관의 ‘남조도출장복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에 대한 열강의 점령 조치는 실력으로 제압해야 하며 모험적인 일본인들에게 선박과 장려금을 지급해서 섬들을 차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실력 행사론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바로 우리 땅 독도다. 일본 상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 어업회사를 설립하고 독도의 강치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치는 물개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로서 바위가 많고 먹이가 풍부한 독도가 주요 서식지였다. 독도박물관에 전시된 ‘지키지 못해 사라져버린 슬픈 강치 이야기’에 따르면 19세기만 해도 동해 연안에 5만여 개체가 서식했으나 이제는 멸종되었다고 한다.

한 해에 무려 3200마리의 강치가 일본 어부들의 창칼과 동물이질에 죽어나갔다. 당시 수컷 강치 한 마리가 황소 값보다 10배 비쌌다고 하니 ‘모험적인 일본인’에겐 황금 노다지요, 일본 정부에겐 자국 산업 보호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제국주의 영토 침략의 희생물이 된 독도 강치는 마침내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의해 멸종동물로 공식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강치때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오늘의 독도 풍경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지금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

한 시점이 아닐까. 일본 시네마현정 다케시마 자료실에는 강치 캐릭터가 전시되고 있다. 캐릭터를 활용해 독도가 자기네 영토임을 홍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다.

멸종시킨 장본인들이 이제 다시 그 명령을 캐릭터화해서 국제 분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평화와 문화를 앞세우는 일본식 스토리텔링의 정치적 이면이 씩씩하다.

독도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우리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다. 해양수산부도 이 점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 물개 복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다행히 독도에 강치와 유사한 종들이 종종 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제대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 독도 주변의 폐그물을 깨끗이 걷어내야 하고 선박들의 소음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 독도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구 생태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미래 갈등에 대응하는 좋은 전략의 하나다.

기고

갑오년 가을, 평양의 푸른 하늘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대표단 평양 방문기



장두석  
한민족생활문화연구원 이사장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북녘을 다녀왔지만 이번 방문에서 본 평양 시내는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이였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주민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6년 전에는 없던 택시가 다니고 있었는데 평양에만 600여 대가 있다고 했다. ‘그날의 행군’을 거칠 정도로 힘들었던 경제 문제가 다소 풀린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 일행이 머물렀던 약강도호텔은 변함은 없었지만 평양의 관문인 순안공원은 크게 확장되고 있었고, 상품도 달라·유로·인민폐·원화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있었다. 조상의 얼이 서린 유적지들과 전통문화는 잘 보존되고 있었다. 단군릉은 말끔히 꾸며졌고, 동명성왕릉에는 매년 봄·가을에 음식 바치는 일을 거르지 않는다고 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평양 단군릉에서 남과 북, 해외동포가 함께 2005년 이후 9년 만에 민족공동행사를 열었다. 시조 단군대제를 올린 후 펼쳐진 대동놀이 문화행사는 통일의를 함께 하며 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방법을 나누며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환상에 의기투합하는 감격도 맛보았다.

행사에서 발표된 북측 대표단 연설문에도 남북의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교류행사를 함께 하며 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방법을 나누며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환상에 의기투합하는 감격도 맛보았다.

남북 5명씩 한 상에 어우러졌던 만찬장에서 만난 북측 인사들은 “민간인 대화를 수 없이 늘려가고, 교류와 협력의 길을 찾고, 서로 존중하며 겸손하고 융서하자”고 다짐했다.

북녘의 음식은 친환경 천연식으로 만들어 좋았다. 김치가 가장 우선이 되는 밥상이어서 한 사람당 하나씩 김치보시기가 나왔다. 음식은 정갈하고 맵고 간이 딱 맞았다. 호텔음식이었지만 가정의 밥상

과 다름이 없었다. 음식은 공장에서 자연 식으로 발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인공이 첨가되지 않은 음식들이 인상 깊었다. 된장국물과 해산물도 맛갈 났다. 고기는 별로 없었다. 아쉬운 것은 밥이 흰 쌀밥이라는 것이었다. 술은 화학소주가 아니라 잘 증류된 술이었고, 대동강맥주의 맛도 일품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인상 깊었다. 유치원에서는 공부보다 질서를 가르치고 식생활, 의생활, 예절 등 생활문화와 놀이 문화를 알선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성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였다. 아이는 병원에서 낳지 않고 조산원에서 전통방식으로 자연분만을 하고 있었다.

평소 건강법을 펼쳐온 사람으로서 평양의 고려아동병원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항생제나 화학약이 아닌 약초를 달여 쓰고 발효시키거나 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다. 주사와 약으로 즉각적인 효과만 주고 몸은 망가뜨리는 우리 현실이 नी리에 겹쳤다.

남북이 그동안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쌓아놓은 것도 만만치 않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개성공단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살려내고 실현해간다면 여러 어려

움을 물리치고 통일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의견 차이로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치적인 부분은 세월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먼저 부담이 적고 감정의 벽을 허물도록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체육·문화·관광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금강산관광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모든 국제체육행사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 간다면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과 평양을 잇는 남북화합의 거대 경제지대를 만들어낸다면 어려울 것을 겪고 있는 남북이 함께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작은 차이를 넘어 남북이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만나다면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꽃피우게 될 통일 조국이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같이 불렀던 도라지, 아리랑, 노동가면의 함창이 삼천리강산을 휘감는 메아리가 되어 통일의 한걸음을 앞당기는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행사를 함께 했던 북방단 일행들 모두가 남북이 한마음이었음을 이심전심으로 느낄 수 있었으리라.

의료칼럼

‘진료과목 피부과’가 왜 이리 많아요?



신삼식  
광주전남 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유사 의료행위를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수가 부족했던 예전에는 동네마다 약방이 있었고 조산원, 간호보조사들이 그 수요를 감당했었다. 심지어 비 의료인들, 소위 돌팔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의료제도로 통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서 전문의사들의 경영이 어려워 부도를 맞는 현실이길 보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과를 찾는 수요도 늘어난다. 이때 의료경영이 어려워진 의사

들이 자신의 전문과목을 버리고 피부미용에 진출하고 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 IPL과 같은 레이저를 사용해 피부미용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를 대법원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요새 동네마다 간판에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쓰여진 의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피부미용에 대한 시술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는 의원이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라고 믿고 가지지만, 실제로는 비전문의들이 진료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만 취득하면 어떤 진료과목으로든 지 개업할 수 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의학의 특성상 6년간의 의대교육으로 수준 높은 진료를 하기에는 부족해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을 마친 후,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레지던트 4년간의 교육·진료를 하고나 다음 전문의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즉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11년이 걸린다.

비전문의들의 피부과 표방은 생존을 위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 해도 잘못된 정보로 혼동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진료를 피부과에 가서 치료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전문과목을 숙여서 피부과전문과가 간판에 산부인과로 광고해 전문의라고 하면서 진료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으로 광고되는 대부분의 피부과광고가 비전문의들이다. 하지만 피부과라고 광고하고 있으며, 전화로 물어보면 전문이라고 환자에게 속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전문의를 찾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어느 의원에서는 미국에서 피부과학 공부를 했다거나 미용기술을 유명 의사에게 배웠다고 하면서 전문의라고 주장하는 데, 그런 단기 연수를 대학병원에서 매일 수 많은 환자를 보고 논문을 쓰면서 공부한 정규 수련과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은 힘들여 전문의 과정을 익힐 필요도 없으며 의료교육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전문의를 구분하

는 해안이 필요하다. 전문의를 구별하는 방법은 먼저 ‘OO피부과의원’, ‘OO내과의원’의 경우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다. 하지만 ‘OO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는 해당전문 의가 아니다.

또 간판에 진료과목 명시는 상호보다 작게 1/2 크기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잘못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 수정하도록 한다. 해당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료진의 약력을 확인할 때 비전문의의 경우 그냥 전문의라고 써놓는다. 가끔 의료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미용전문, 모발전문이라고 과장하기도 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창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실력 없는 전문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전문의인 것처럼 거짓 광고로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단순히 환자에게 있다고만 하기 힘들다. 행정기관에서도 의료제도가 정착되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전문의를 사칭하도록 방치한다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社說

부실 농정이 부른 친환경농업 포기 속출

함들게 고수해온 친환경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농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친환경을 선택했지만 고생만 하고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았던 전남지역 2만1297농가가 울 들어 친환경을 하지 않겠다고 인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친환경 5만8383농가 중 40%에 달하고 면적도 친환경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국 친환경 재배면적의 40%를 넘어 압도적 1위였던 비율도 24% 수준으로 떨어졌다. ‘친환경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친환경 인증 검사를 거치면서 결격 사유가 확인돼 인증이 취소된 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더 이상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했다는 점이다. ‘농민의 반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친환경이 대체인 상황에서 농민들의 이나 정치권에 있었던 인물은 현장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단체장과의 정실이나 결탁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공직자나 외부 인사가 ‘보은’ 차원에서 공기업 대표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산하기관장이나 임원 자리를 얻으려면 한직 시절부터 출세를 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장이나 임원 인선시 철저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격을 갖춘 인사가 직책을 맡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산하 기관장을 맡을 때 우려되는 폐해는 우선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만큼 기관장도 해당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직

민선자치 이후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독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파피아) 현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정실·무능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사회회 임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민선 3기(2002년)부터 민선 6기(2014년)까지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54명 중 42.6%인 23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도 17%인 9명이었다. 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된 경우는 공사·공단은 6명, 출연기관 10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산하 기관장을 맡을 때 우려되는 폐해는 우선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만큼 기관장도 해당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직

민선자치 이후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독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파피아) 현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정실·무능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사회회 임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민선 3기(2002년)부터 민선 6기(2014년)까지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54명 중 42.6%인 23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도 17%인 9명이었다. 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된 경우는 공사·공단은 6명, 출연기관 10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산하 기관장을 맡을 때 우려되는 폐해는 우선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만큼 기관장도 해당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직

민선자치 이후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독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파피아) 현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정실·무능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사회회 임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민선 3기(2002년)부터 민선 6기(2014년)까지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54명 중 42.6%인 23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도 17%인 9명이었다. 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된 경우는 공사·공단은 6명, 출연기관 10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산하 기관장을 맡을 때 우려되는 폐해는 우선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만큼 기관장도 해당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직

민선자치 이후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독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파피아) 현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정실·무능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사회회 임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민선 3기(2002년)부터 민선 6기(2014년)까지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54명 중 42.6%인 23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도 17%인 9명이었다. 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된 경우는 공사·공단은 6명, 출연기관 10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산하 기관장을 맡을 때 우려되는 폐해는 우선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만큼 기관장도 해당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